

2021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21.09.11.시행)

[출제평]

PSAT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행정학 문제는 난이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대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평이하고 정형화된 기출문제와 변형된 기출문제가 대부분(14문)이었지만, 디테일을 요하는 문제도 상당수(7문) 출제되었고 특히, 참신한 신경향 문제도 일부(4문) 출제되었습니다. 디테일을 요하는 문제와 신경향 문제에서 고득점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을 요하는 문제로는 문3(주민참여예산제도), 문4(거래비용이론), 문5(조직구조 설계), 문10(피들러의 리더십), 문17(쓰레기통모형), 문20(브룸의 기대이론), 문21(성인지예산) 등이었으며, 신경향 문제는 문9(홉스테드 문화차원), 문14(정책평가절차), 문16(다양성 관리), 문19(정책오류), 문22(오즈의 분권화 정리) 등이었습니다. 다만 문9(홉스테드 문화차원론)과 문22(오즈의 분권화 정리)는 사실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였습니다.

선행정학 커리큘럼에 따라 기본 개념과 이론을 충실히 학습해온 수험생이라면 이해력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고득점 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출제는 앞으로 PSAT 체제 하의 행정학 출제스타일과 난이도를 엿볼 수 바로미터가 될수 있으니 이번 출제 경향과 수준을 참고하여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중규 -

● 분야별 출제분석

총론	정책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자치
2문	5문	5문	4문	4문	4문	1문

● 기출여부 분석

기출 또는 기출변형문제	디테일을 요하는 문제	신경향문제
14문	7문	4문

● 중요도 분석

A급	B급	C급	D급
16문	4문	3문	2문

01. 다음의 단점 혹은 한계로 인하여 정착이 어려운 예산제도는?

- 사업구조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
- 결정구조가 집권화되는 문제가 있다.
- 행정부처의 직원들이 복잡한 분석 기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 ① 품목별 예산제도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③ 계획예산제도
- ④ 영기준 예산제도

[답] ③ 제시문은 모두 계획예산(PPBS)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PPBS는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의 작성이 쉽지 않고, 최고관리층과 전문가가 하향적으로 주도하는 예산으로 결정구조가 집권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비용편익분석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석기법이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무원과 의회의 반대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 계획예산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계획과 예산의 일치 (기획변경의 신속성)	① 제도적 경직성 - 융통성 부족
② 자원배분의 합리화	② 목표설정 및 사업구조 작성의 어려움
③ 조직의 통합 운영	③ 과도한 문서와 환산작업 곤란
④ 의사결정의 일원화	④ 복잡한 분석기법에 대한 의회의 이해 부족과 의회 지위 약화 우려
	⑤ 정치적 측면 고려 소홀
	⑥ 하향적 예산으로 중앙집권화 조래

02. 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활용된다.
- ②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 ③ 법률상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 ④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해 집행할 수 있다.

[답] ② 우리나라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국회의 의결 없이 일정한 경비는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준예산의 용도

-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2021 7급 선행정학 p.631

03.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 ④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답]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있지 않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등의 내용만 규정되어 있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 ☑ ② [O]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 상 의무화된 제도이다.
- ③ [O]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4년 최초로 실시되었다.
- ④ [O]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에 의한 직접 참여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 위축 또는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의의

- ①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공식 참여 → 재정협치(Fiscal Governance)
- ② 성과를 중시하는 NPM보다 재정주권을 중시하는 Gov의 산물

(2) 도입

- ① 해외 :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스(1989)에서 세계 최초 도입
- ② 국내
 - 2004 광주광역시 북구(국내 최초)
 - 2006 「지방재정법」에 근거 마련(입의규정)
 - 2011 「지방재정법」상 의무화 → 제도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주민의견 반영 의무 X
 - 2018 중앙정부도 「국가재정법」상 의무화, 2019 예산부터 시행

☞ 2021 7급 선행정학 p.766

04. 거래비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데에는 시장이 계층제보다 효율적인 수단이다.
- ② 거래비용은 탐색비용, 거래의 이행 및 감시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③ 시장의 자발적 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계층제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④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 생겨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지는 이유를 조직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접근방법이다.

[답] ①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의한 거래비용은 계층제보다 시장에서 증가한다. 따라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제어(통제)하여 거래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시장보다 조직화된 계층제가 더 효율적이다.

- ② [O] 거래비용에는 탐색비용, 거래조건 합의비용 등 사전비용과 분쟁조정비용 등 사후비용이 포함된다.
- ③ [O]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계층제 내의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를 내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거래가 내부화된 조직이 바로 계층제 조직이다.
- ④ [O]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이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모형으로 경제학을 조직현상에 응용한 이론이다.

● 거래비용경제학에 입각한 조직의 효율성 조건

조직의 효율성 조건 ① - 시장보다 관료제가 효율적이라면 (조직가설)	조직의 효율성 조건 ② - 관료조직의 효율화 방안 (M형가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커야 함 ② 더 크다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거래의 내부화(조직통합)가 필요 ③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거대조직이나 계층제적 조직구조의 출현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능의 유사성에 따라 편제된 '기능별 조직(U형)' 대신 일의 흐름에 따라 편제된 '흐름별 조직(M형)' 제시 → Mintzberg의 분화형태조직(사업부제)과 유사한 조직

05.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손실 보상, 임용상 불이익 방지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②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는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③ 교육훈련과 자기계발 기회 제공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④ 개혁 시기 조정은 강제적 전략이다.

[답] ③ 교육훈련, 자기계발 기회 제공 등은 행정개혁에 있어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① [X]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② [X]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④ [X] 공리적·기술적 전략이다.

● 행정개혁의 저항극복전략

규범적·사회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참여의 확대 및 자기계발기회 제공 ② 의사소통의 촉진 ③ 집단토론과 사전 교육훈련 ④ 카리스마나 상징의 활용 ⑤ 충분한 시간 부여
공리적·기술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혁의 점진적 추진 ②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③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④ 개혁방법·기술의 수정 ⑤ 적절한 인사배치·호혜적 전략 ⑥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의 명확화
강제적·물리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식적인 긴장 조성 ② 물리적 제재나 압력 사용 ③ 상급자의 권력 행사

0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배분하여야 한다.
- ㄴ. 서로 관련된 사무들을 배분할 때는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ㄷ.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보다는 시·도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ㄹ. 시·군 및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ㅁ. 주민의 편의증진과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① ㄱ, ㄷ, ㅁ
- ② ㄴ, ㄷ, ㄹ
- ③ ㄱ, ㄴ,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ㅁ

[답]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배분의 원칙으로 모두 옳은 설명이다.

- ㄱ [O]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 ㄴ [O] 포괄적 배분의 원칙
- ㄷ [O] 보충성의 원칙
- ㄹ [O] 행정적·재정적 지원 병행의 원칙
- ㅁ [O]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불경합의 원칙)

● 사무배분의 원칙

- ① 책임명확화(불경합)의 원칙 : 이중(중복)배분 금지
- ② 능률성(경제성)의 원칙
- ③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 보충성의 원리
- 광역과 기초 간 경합 시에는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 분쟁가능성,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기초자치단체에 우선 배분
- ④ 현지성의 원칙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는 원칙
- ⑤ 계획·집행 분리의 원칙
- ⑥ 이해관계범위의 원칙
- ⑦ 경비부담능력의 원칙
- ⑧ 종합성의 원칙 : 일선기관보다는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좋다는 원칙
- ⑨ 기타 : 행정수요 특수성의 원칙, 상호협력원칙, 포괄성의 원칙 등

☞ 2021 7급 선행정학 p.826

07.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제재력이 약화되는 역기능이 있다.
- ②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 ③ 호혜주의는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답] ④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현상으로 불신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줄이고 능률성을 재고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 ① [X]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제재력을 가진다.
- ② [X]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은 사회적 자본의 기본요소이다.
- ③ [X] 사회적 자본은 이기주의나 대가없는 무조건적인 봉사가 아니라 호혜주의 규범이다.

● 사회적 자본의 특징

- ① 자발적 네트워크 - 수평적·협력적·가변적·상향적
- ② 호혜주의 -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님
- ③ 상호신뢰 :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 ④ 친사회적 사회규범
- ⑤ 공동체주의
- ⑥ 정치·경제발전의 윤리적 기반
- ⑦ 국력과 국가경쟁력의 실체

● 사회적 자본의 효용과 한계

효용	한계
① 개인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능력이자 자산	① 거래 및 형성과정이 불투명·불확실
②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 - 배타적인 소유권 행사 불가	② 측정의 기술적 곤란
③ 협력적 행태 촉진 ⇒ 혁신적 조직발전 촉진	③ 동조성의 이유로 개인의 사적 선택 제약
④ 행동의 효율성 제고	④ 집단 결속력으로 타 집단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효과 초래 우려
⑤ 거래비용 감소 ⇨ 신뢰제고, 가외성의 필요성 최소화	
⑥ 다양성은 창의력과 학습의 원천	
⑦ 사회적·도덕적 규범으로 제재력 발휘	

☞ 2021 7급 선행정학 p.33

08. 일반적인 조직구조 설계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계선은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참모는 정보 제공, 자료분석, 기획 등의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 ㄴ. 부문화의 원리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의미한다.
- ㄷ.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고도의 수직적 분화가 일어나 고층구조가 형성되고, 좁을수록 평면구조가 이뤄진다.
- ㄹ. 명령통일의 원리는 부하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답] ② ㄷ만 틀리고 ㄱ, ㄴ, ㄹ은 맞다.

- ㄱ [O] 계선은 결정권과 명령권을 행사하지만 참모는 정보제공,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ㄴ [O] 부문화(departmentation)의 원리란 분화된 여러 기능이나 활동을 수평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서로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조직단위로 묶는 것을 말한다.
- ㄷ [X] 통솔범위가 넓을수록 수직적 분화의 필요성이 낮아져서 저층구조(수평구조)가 형성되고 반대로 통솔범위가 좁을수록 수직적 분화의 필요성이 높아져 고층구조가 나타난다.
- ㄹ [O] 명령통일의 원리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일원화의 원리를 의미한다.

● 조직의 원리

- ① 계층제의 원리 -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를 상하간에 등급화
- ② 전문화의 원리 - 직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가지 주된 업무를 분담
- ③ 명령통일의 원리 - 한 사람에게만 보고하고 지시받는 원리 (명령계통 일원화)
- ④ 통솔범위의 원리 - 1인의 상급자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통솔범위가 넓을수록 유기적 구조, 좁을수록 기계적 구조가 나타남)
- ⑤ 조정의 원리 - 공동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

09.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강한 경우 공식적 규정을 많이 만들어 불확실한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려 한다.
- ②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인 간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 ③ 권력거리가 큰 경우 제도나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상당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 ④ 남성성이 강한 문화는 여성성이 강한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려고 한다.

[답] ② 홉스테드(Hofstede)는 지향점에 따라 조직문화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문화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집단주의가 강한 문화는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인 간 관계가 긴밀하고 결속력과 협력심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 ① [O] 불확실성 회피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③ [O] 권력거리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④ [O] 남성성-여성성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

●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 차원

권력거리	조직이나 단체(가족과 같은)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고 기대하는 정도 ⇒ 권력 거리가 작은 문화가 민주적이고 권력 거리가 큰 경우 권력의 차이를 인정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들이 단체에 통합되는 정도 ⇒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적 성취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반면, 집단주의에서는 반대로 개인 간 결속력을 강조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성과 애매성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의 정도 ⇒ 불확실성 회피정도가 강할수록 구성원이 공식화 등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불안에 대처
남성성-여성성	성별 간 감정적 역할의 분화 ⇒ 남성적인 문화에서는 성역할의 차이가 크고 유동성이 작음
장기지향-단기지향	사회의 시간범위 ⇒ 장기 지향적인 사회는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

10.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과업구조의 조합에 따라 상황적 유리성(situational favorableness)을 설명한다.
- ②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경우 과업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③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사용하여 리더를 과업 지향적 리더와 관계 지향적 리더로 분류했다.
- ④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답] ①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율성은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며 상황요인으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구조의 특성, 리더의 직위권력 등 3가지를 들었다. [암] 관업직

●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

- ① 싫어하는 동료(LPC) 척도를 이용하여 리더십을 과업형(I)과 관계형(C)으로 구분
- ② 리더십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상황변수 제시
 -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
 - 과업구조
 - 리더의 직위권력
- ③ 결론 : 상황이 유불리할 때는 과업형이, 중간일 때는 관계형이 효율적

11. 엽관주의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 민주화에 기여
- ②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 강화
- ③ 정당정치 발달에 공헌
- ④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답] ④ 엽관주의는 정권교체 시 공무원이 대량경질(교체임용)되는 제도로 공무원들의 임기를 정하여(임기 4년법) 정치인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로써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

☑ ①②③ [O] 모두 엽관주의의 장점에 해당한다.

● 엽관주의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 ② 평등이념 구현 - 한정된 공직 널리 개방 ③ 관료제의 쇠퇴 ④ 정치적 리더십(통솔력) 강화 ⑤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⑥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민주성·대응성·책임성	① 정치적 중립 저해 : 정당의 사병화 - 공익의 저해 ② 행정의 안정성 저해 ③ 비능률·무질서·낭비·부패·무능 ④ 임용의 공평성 상실

1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제도이다.
- ②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인사제도이다.
- ③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집단화할 염려가 있다.
- ④ 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답]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폐쇄형에 입각하여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써 공무원의 일체감이나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제도이다.

- ① [O]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으로 맞는 지문이다.
- ② [O] 직업공무원제도는 연령과 학력을 제한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영입한다.
- ③ [O] 폐쇄성으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둔감하고 특권집단화 우려가 있다.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장점	단점
① 사기 제고	① 민주통제의 곤란
② 인재의 조기 발굴	- 지나친 신분보장
③ 공직사회의 연대감(단결력) 향상	② 환경변동예의 부적응
④ 행정의 안정성	- 무사안일
⑤ 고위 공직자의 양성	③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④ 참여적 관료제 저해
	⑤ 학력과 연령 등 자격 제한
	- 제한된 기회균등으로 인한 비민주성
	⑥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⑦ 행정의 전문성 저해

13. 살라몬(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 중 직접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회적 규제
- ② 보조금
- ③ 조세지출
- ④ 공기업

[답] ④ 살라몬(Salamon)은 직접성(정부의 직접 개입)의 여부에 따라 정책수단을 직접적 수단과 간접적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공기업은 정부가 설립한 공기업에 의하여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직접적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암] 대소정보공경

①②③ [X] 모두 간접적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직접성 기준)

직접성	수단	개념
낮음	손해책임법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보조금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시 생산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지급보증	정책집행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을 정부가 보증
	기업지원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등
	바우처	빈곤층 소비자에게 쿠폰(이용사은권)을 지급
중간	조세지출	조세감면에 의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행을 지원
	계약(위탁)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생산을 민간에게 위탁
	사회 규제	바람직한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벌금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전적 패널티 부과
	부과금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불이익(부담)을 주는 교정적 조세
높음	공적보험	유사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직접대부	정부가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게 직접 대출
	경제규제	민간의 경제활동을 직접 규제(인허가 등 진입규제)하여 집행
	공공정보	정부가 민간에게 공적정보를 직접 제공(공개)
	공기업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의하여 정책을 집행
	정부소비	정부가 공적조직을 만들어 예산으로 직접 시행

14.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정책평가 대상 확정
- ㄴ. 평가 결과 제시
- ㄷ. 인과모형 설정
- ㄹ. 자료 수집 및 분석
- ㅁ. 정책목표 확인

- ① ㄱ→ㄴ→ㄷ→ㄹ→ㅁ
- ② ㄴ→ㄱ→ㄷ→ㄹ→ㅁ
- ③ ㄴ→ㄱ→ㄷ→ㄹ→ㅁ
- ④ ㄴ→ㄷ→ㄱ→ㄹ→ㅁ

[답] ③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③이 맞다. 정책목표의 식별확인 → 평가대상과 범위 확정 → 평가기준 설정 → 인과모형 설정 → 연구설계 → 자료수집 및 분석 → 평가결과 제시·활용·환류 순이다. [암] 목기인연자자활

15. 개방형 또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외부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을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아이디어를 수용해 공직사회의 침체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②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일반행정보다 전문가 중심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 ③ 개방형 인사제도는 폐쇄형 인사제도에 비해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형성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장기근무를 장려한다.
-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에 비해 내부승진과 경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다.

[답]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급에 외부전문가나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로 공직사회의 침체를 막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지식 등을 수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 제도이다.

- ☑ ② [X] 일반적으로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에 바탕을 두고 일반행정이 중심의 인력구조를 선호한다.
- ③ [X] 개방형 인사제도가 아니라 폐쇄형 인사제도의 장점이다.
- ④ [X] 폐쇄형 인사제도가 아니라 개방형 인사제도의 단점에 해당한다.

● 개방형인사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의 획득	① 재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와 사기 저하
② 공직의 침체 방지 - 문호 개방으로 신진대사 촉진	② 관료의 비능률화 - 충성심 저하
③ 성과관리의 촉진	③ 직업공무원제에 불리 - 신분 보장 저해
④ 관료의 소극적 행태(복지부동) 시정	④ 공직 사회의 응집성, 일체감, 안정성 저해
⑤ 정치적 리더십의 강화	⑤ 임용구조의 복잡성·비용 증가
⑥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⑥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 - 정치적 오용으로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곤란
⑦ 생산적 경쟁으로 재직자의 자기개발 노력 촉진	

16.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오늘날 개인의 성격, 가치관의 차이와 같은 내면적 다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② 다양성 관리란 내적·외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조직구성원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 과정이다.
- ③ 균형인사정책, 일과 삶 균형정책은 다양성 관리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
- ④ 대표관료제를 통한 조직 내 다양성 증대는 실적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답] ③ 다양성(diversity)이란 한 집단 내에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기 다른 특성, 신념, 상대적 위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다양성은 외적인 요소에 의한 "표면적 다양성"과 내적인 요소에 의한 "내면적 다양성"으로 구분된다. 다양성은 조직 내에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문화 간의 상이함에서 오는 이질감, 업무협력의 저해 등의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 간 차이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한다면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동력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인사관리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성 관리(managing diversity)란 구성원들을 일률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다양한 차이와 배경, 시각을 조직업무에 적극 반영시키려는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전략으로 개인별 맞춤형 관리, 일과 삶의 균형(WLB), 대표관료제(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 미국의 적극적 조치) 등에 의한 인적 구성의 다양화 등이 대표적인 수단이다.

● 다양성 관리전략

인적자원관리	구성원을 통제가 아닌 육성대상의 자산으로 여기는 관리
맞춤형 관리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관리
다문화조직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조직
대표관료제	출신집단별로 공직구성을 할당하여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균형인사정책
WLB(워라밸)	업무와 개인의 다양한 삶을 조화시키려는 일과 삶의 균형
개별적 배려	개인의 다양성과 상이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맞춤형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변혁적 리더십

☞ 2021 7급 선행정학 p.

17.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의 응집성이 아주 강한 혼란상태에 있는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한다.
- ② 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은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하는 에너지가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 ③ 쓰레기통 모형의 의사결정 방식에는 끼워넣기(by oversight)와 미뤄두기(by flight)가 포함된다.
- ④ 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는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답] ③ 쓰레기통모형에서는 전통적인 합리모형과 달리 문제해결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끼워넣기(by oversight)나 미뤄두기(by flight) 등의 의사결정전략이 활용된다. 끼워넣기는 다른 관련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재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날치기 통과를 의미하며, 미뤄두기는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결정을 미루는 진뱀기 결정전략에 해당한다.

- ① [X] 쓰레기통모형은 응집성이 약한 혼란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 ② [X] 불명확한 기술이 아니라 부분적·간헐적(일시적) 참여자에 해당한다.
- ④ [X] 문제성 있는 선호가 아니라 불명확한 기술에 해당한다.

● 쓰레기통 모형의 전제조건

- ① 문제성 있는 선호 : 불분명한 선호와 목표
- ② 불분명한 분석기술(인과기술) : 목표와 수단간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 불완전
- ③ 수시적 참여 - 시간적 제한으로 부분적, 간헐적, 일시적 참여
- ④ 조직화된 무질서와 혼돈

☞ 2021 7급 선행정학 p.271

18.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립되는 입장에 내재된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시키고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개인의 판단을 집약할 때, 불일치와 갈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수치를 사용한다.
- ③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비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이게 한다.
- ④ 참가자를 선발하는 과정은 '전문성'자체보다는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바탕을 둔다.

[답] ③ 정책델파이 기법은 전통적인 델파이 기법과 달리 결론이 어느 정도 표면화 되고나면 참가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벌인다.

- ① [O] 정책델파이는 다양한 창도자들의 대립되는 가정과 논증을 표면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O]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조장)한다.
- ④ [O] 정책델파이는 동질적인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응답자를 선정한다.

●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차이점

구분	전통적 델파이	정책델파이
적용	일반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응답자	동일영역의 일반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식견 있는 다양한 창도자
익명성	철저한 격리성과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 보장(사후상호교차토론)
통계 처리	의견의 대푯값·평균치(중위값) 중심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이원화)된 통계처리
합의	합의(근접된 의견) 도출	구조화된 갈등(극단적이거나 대립된 견해의 존중·유도)
토론	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 및 대면토론

19. 통계적 가설검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1종 오류는 실제로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은 것인데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② 제2종 오류는 모집단의 특성이 영가설과 같지 않는데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 ③ 제1종 오류는 α 로 표시하고, 제2종 오류는 β 로 표시한다.
- ④ 확률 $1-\alpha$ 는 검정력을 나타내며, 확률 $1-\beta$ 는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답] ④ 반대이다. $1-\alpha$ 가 신뢰수준(1-유의수준)이고, $1-\beta$ 가 검정력에 해당한다. $1-\alpha$ 는 신뢰수준으로 통계치를 믿을 수 있는 신뢰구간을 의미하며 여기서 α 는 유의수준으로 유의수준이 0.05이면 신뢰수준은 0.95가 된다. $1-\beta$ 는 검정력으로 가설의 참거짓과 관계없이 귀무가설(영가설 : null hypothesis)을 기각시킬 확률을 의미한다.

- ① [O] 1종오류는 옳은 귀무가설(영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 ② [O] 2종오류는 틀린 귀무가설(영가설)을 인용하는 오류
- ③ [O] 1종오류는 α 에러라고 하고 2종오류는 β 에러라고 한다.

● 정책오류의 유형

1종오류(알파에러)	2종오류(베타에러)	3종오류
옳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틀린 가설(귀무가설)을 인용하는 오류	가설의 검증이나 대안 선택 과정에서는 오류가 없었으나 정책문제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원적인 오류
틀린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오류	옳은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오류	
틀린 대안을 채택하는 오류	옳은 대안을 채택하지 않는 오류	
정책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판단하는 오류	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오류	

● 신뢰수준과 검정력

$1-\alpha$	신뢰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옳은 귀무가설을 인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통계치를 믿을수 있는 신뢰구간) ② α는 유의수준(1종오류를 범할 확률) ③ $1-\alpha$는 1종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
$1-\beta$	검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설의 참거짓과 관계없이 귀무가설(영가설 : null hypothesis)을 기각시킬 확률 ② β는 2종오류를 발생시킬 확률 ③ $1-\beta$란 틀린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2종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

20.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기부여의 과정이론(process theory) 중 하나이다.
- ② 기대감(expectancy)은 개인의 노력(effort)이 공정한 보상(reward)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관적 믿음을 의미한다.
- ③ 수단성(instrumentality)은 개인의 성과(performance)와 보상(reward)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 ④ 유인가(valence)는 개인이 특정 보상(reward)에 대해 갖는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답] ②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이란 개인의 노력이 어떠한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이나 확률을 의미한다.

- ① [O]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 ③ [O] 수단성이란 개인이 이루어낸 성과가 보상(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 ④ [O] 유인가는 개인이 최종결과나 보상에 대해서 갖는 선호(매력)의 강도를 의미한다.

● V.Vroom의 동기기대이론(VIE이론)

- ① 기대감(E) -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 ② 수단성(I) - 성과(1차 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 산출·결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 ③ 유의성(V) - 보상(2차 산출이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21.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②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여성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 ③ 1984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④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금사업을 제외한다.

[답] ① 성인지예산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2010회계연도부터, 지방정부는 2013회계연도부터 도입되었다.

- ② [X]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은 예산과정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구현하자는 것이지만 어느 한쪽 성만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중심의 예산 또는 여성성(여성지원)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 ③ [X] 성인지예산제도는 1984년 호주에서 세계최초로 도입되었다.
- ④ [X] 우리나라의 성인지예산제도는 중앙정부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사업에 2010년에 먼저 적용이 되었고, 이어 2011년부터는 기금사업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 남녀평등예산(성인지예산)

- ① 세입·세출예산에서 남녀평등을 구현하려는 예산
- ② 예산정책의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실시
- ③ 호주가 1984년 처음 채택
- ④ 한국 : 성인지 예산제 도입(2010)

22. 오츠(Oates)의 분권화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 ㄴ. 공공재의 지역 간 외부효과가 없다.
- ㄷ.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답] ④ 오츠(Oates)의 분권화 정리(the Decentralization Theorem)란 어떤 특정한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가 한정되는 공공서비스의 경우 이것을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티부가설의 전제조건과 유사한 모형이다. 따라서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소비가 한정된 지역에 그치는 경우, 그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 ㄱ [X] 지방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전제한다.
- ㄴ [O] 티부가설과 마찬가지로 지역 간 외부효과는 없는 것으로 전제한다.
- ㄷ [O] 지방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파레토 최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 오츠(Oates)의 분권화 정리

- ① 지역공공재의 생산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담당하든 동일한 비용이 든다면,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그 지역에 적절한 양의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보다는 효율적이다.
- ② 중앙정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므로 공공재를 획일적으로 공급함에 반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공공재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이다.
- ③ 지방정부의 규모는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지방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보다는 소규모 자치정부에 의한 행정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는 티부가설과 맥락이 유사하다. 따라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규모의 추구가 필요하다.
- ④ 지역 간 외부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선호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23.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 ② 기관(機關) 간 이용도 가능하다.
- ③ 세출예산의 항(項) 간 전용은 국회 의결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 ④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로 볼 수 없다.

[답] ② 입법과목 간의 이용은 장·관·항 간에도 가능하지만 기관 간에도 가능하다(「국가재정법」 제47조).

● 「국가재정법」 제47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① [X]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또는 위임으로 할 수 있다.
- ③ [X] 항 간의 융통 사용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에 해당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 ④ [X] 이용과 전용은 한정성 원칙 중 질적 한정성의 예외가 된다.

●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 ① 공개성 원칙 - 국민에게 공개(예외) 신입예산, 기밀정보비(국정원 예산)
- ② 명료성 원칙 - 내역별로 명시(예외) 총괄예산
- ③ 완전성 원칙 - 빠짐없이 계상(예외) 순계예산, 현물출자, 외국차관전대, 기금, 수입대체경비
- ④ 단일성 원칙 - 하나로 편성(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기금
- ⑤ 한정성 원칙 - 질적, 양적, 기간적 한계 엄수(예외) 예비비, 이용·전용,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
- ⑥ 동일성 원칙 - 특정세입의 특정세출연계금지(예외)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
- ⑦ 사전의결 원칙 - (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 ⑧ 정확성 원칙 - 예산과 결산내역 일치

24.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사법부가 임명한다.
- ④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답] ② 옴부즈만 제도는 법적으로 확립된 공식 기구·제도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에 의존하는 제도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① [X] 시민들의 신청에 의한 조사가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X]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임명하며 입법부 소속 행정감찰관이다.
- ④ [X] 문제가 되는 행정행위를 취소·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간접적인 통제에 해당한다.

● 옴부즈만의 특징

- ① 의회 소속
- ② 불법행위(합법성)는 물론 부당행위(합목적성)도 대상
- ③ 간접적 통제 : 무효·취소 불가
- ④ 직권에 의한 조사
- ⑤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 절차는 비공식적, 조사는 공개적
- ⑥ 독립된 헌법기관 :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

☞ 2021 7급 선행정학 p.759

25.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은 빅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정형 데이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③ 각종 센서 장비의 발달로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나타났다.
- ④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답] ① 빅데이터(Big Data)란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규모데이터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진은 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 ② [O] 빅데이터에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모두 포함된다.
- ③ [O] 각종 센서장비(인공지능 등 정보나 변화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기구)의 발달로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④ [O] 빅데이터는 다양성(Variety), 대규모 용량(Volume), 실시간성(Velocity) 등을 특징으로 한다.

● 빅데이터의 3대 특징

다양성 (Variety)	정형화된 데이터를 넘어 정형 또는 비정형의 다양한 정보
속도 (Velocity)	시간에 민감, 실시간 라이브형태 즉,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
크기 (Volume)	대형의 방대한 정보

☞ 2021 7급 선행정학 p.801